

전국서 “부가세 영세율 적용” 강력 촉구

-축산농 대표, 농발위 도별 의견수렴 간담회서



-취재: 홍보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농어촌발전위원회(위원장: 김범일)가 지난 3월 각 도별로 실시한 농촌지역 현지 의견수렴 간담회에서 배합사료 등 축산생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축산 분뇨처리 시설자금의 전액 국고 보조, 축산융자금에 대한 금리 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 문제가 각 도별로 공통적으로 강력 제기되었다.

농어촌발전위원회는 3월 10

일 전북을 필두로 11일 경기·제주·전남, 17일 경북, 18일 강원·충남·경남, 25일 충북도청에서 농발위원 5~6명과 전문위원 2명, 각 시·도, 시·군 관계 공무원, 농촌지도소, 농수축협 조합장, 농어민후계자연합회, 전농, 농고 교사, 일반농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 현지어론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농민들이 농축수산업을 영위하면서 부딪치는 어려움과 문제점, 농어촌 발전방향, 농어민 복지대책 등 수십가지의 건의사항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농발위는 각 도별 간담회에서 제기된 농민들의 의견을 취합해 6월말까지 마무리할 농어촌발전대책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간담회에는 축산농가 대표로 6~7명씩이 각 도별로 참석했

는데, 본회에서는 경기 엄원섭 이사, 강원 김재철 강원도협의회장, 충북 김철수 충북도협의회장, 충남 김의승 전 대전지부장, 경북 조옥봉 경북도협의회장, 경남 최상백 부회장, 전남 기정도 부회장, 제주 김충세 제주지부장 등이 참석하여 본회의 요구사항을 강력히 건의하였다.

본회 전동용 회장은 농발위원 자격으로 경기도와 충남, 충북도 간담회에 참석, 농민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축산농가들은 어느 지역을 불문하고 배합사료 및 축산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축산분뇨처리 시설자금 전액 국고보조, 융자금 금리 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을 강력히 요구해 이들 세가지 문제점이 일단 전축산농가들의 공통 숙원사항임이 확인되었다.

특히 축산농가 대표들은 축산업계의 10년 숙원사항이고, 대통령 공약사항인 부가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수입개방시대에서 축산업은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농약, 비료, 어구류 등에는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면서 유독 축산농민들이 사용하는 배합사료 등에 부가세



▲농발위원들이 농어민들의 현지여론을 진지한 표정으로 경청하고 있다.
(좌로부터 최상철, 전동용, 한종하 위원)

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 위헌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축산분뇨 처리 시설은 생산성을 높이거나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 투자액 전체가 비용부담으로 남고, 운영비도 계속 소요되므로 선진외국과 같이 시설비를 전액 보조하거나, 최소한 50%이상 보조를 하고, 나머지는 장기저리로 융자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축산시설자금 등의 금리 5%, 상환기간 3년거치 7년 조건 등은 선진외국의 금리 2~3%, 상환기간 25~30년과 비교할 때 매우 불리한 조건이라고 밝히고, 최소한 돼지고기가 수입개방돼 있는 상황에서는 융

자조건도 경쟁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해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밖에도 이번 간담회에서는 ▲UR재협상 ▲농어민 연금제 조속 시행 ▲의료보험제도 통합 일원화 ▲수입농산물 원산지표시 및 감독·처벌 강화 ▲축산정책자금 대출시 후취담보제도 도입 ▲농기계 반값 공급 확대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축사시설시 건축규제 완화(신고제 대상 규모 확대)등 다양한 건의사항이 쏟아져 나왔다.

아무튼 농발위에서 농어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농업발전대책에 반영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